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수탁·위탁기업 1만 5,000개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
- 부산지역은 10월 29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순회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일(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기존 상반기 6개월 거래 중심이던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권 설명회는 29일(목) 오후 2시 기술보증기금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최근 기업 현장의 관심이 높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대상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상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배포한 안내문과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po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문창환 (051-601-5130)
		담당자	주무관	이혜선 (051-601-518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